

북한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및 코로나 확산 상황 분석

Online Series

2022. 05. 13. | CO 22-14

홍 민 (북한연구실장)

최규빈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북한이 5월 12일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개최하여 '최대비상방역체계' 전환을 결정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같은 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여 전국적인 발열증상자 및 오미크론 사망자 상황을 공개하는 등 북한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대규모 확산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4월 말부터 전국적 범위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4월 열병식을 비롯한 중대 행사들이 결정적으로 확산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격리 중심의 관리조치'를 통해 오히려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향후 감염 확산 수준 및 최대비상방역체계 운영 수준에 따라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외부 정세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핵무기 고도화 행보는 전략무기 개발 의지와 대외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 일정대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사일 발사는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방역위기상황'에서 무기 발사를 공개하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핵실험과 같은 '빅 이벤트'의 일정도 감행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코로나 대응 및 향후 행보, 정치적 의도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이 글은 북한의 감염 확진자 발생 공개 의도, 주요 조치 내용의 특징, 방역 상황 등을 분석하고 북한 내 파급영향, 북한의 향후 예상 행보, 국내외 정세에 미치는 영향, 국제협력 가능성 등을 전망한다.

지난 5월 12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는 수도 평양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BA.2, Stealth Omicron)의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공개하고 국가방역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정치국회의는 현 감염 상황에 대한 지도부의 확인(‘인정’), 방역부문에 대한 비판, 각 기관 제반조치 강구, 최대비상방역체계로의 이행 결정서 채택, 김정은 당 총비서의 비상방역에 대한 원칙과 과업 제기 순으로 진행됐다.

오미크론 감염 확산에 대한 심각성 입증 인식, 향후 대처 위한 공개

정치국회의는 이번 상황을 비상방역전선에 구멍이 뚫린 ‘국가최대 비상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 총비서는 ① 감염 상황의 안정적 억제·관리 및 조기 치유를 통한 전파근원의 최단기간 내 제거, ② 전국 각 지역 봉쇄, 사업·생산·생활 단위별 격폐, 감염 전파 공간 완벽 차단, ③ 과학적인 집중적 검사와 치료, 비상용 의료품 예비 동원, ④ 경제 및 생산활동 목표의 차질 없는 완수, ⑤ 주민 불편과 고충 최소화 및 부정적 현상에 대한 대책 강구, ⑥ 전선과 국경, 해상, 공중에서의 경계근무 강화 및 국방에서의 ‘안전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같은 날인 12일(보도 13일)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여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확산 상황도 파악했다.

이번 ‘최대비상방역체계’ 조치는 2020년 1월 28일 ‘국가비상방역체계’가 선포된 이후 2020년 7월 25일 당 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때 첫 번째로 발동되고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회의는 공개형식, 타이밍, 조치내용, 전례 등으로 봤을 때, 일차적으로 북한 지도부가 감염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 발생 공개는 일차적으로 감염 사태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심각성’ 인식은 사전 징후 및 조치 신속성, 공개형식, 기존 전례의 차원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상황인식에서 ‘최대비상방역체계’ 발동까지 늦장 대처 가능성

첫째, 상황인지부터 정치국회의를 통한 공개까지의 시간적 흐름과 개연성, 조치상의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 징후 측면에서 5월 4일 직전에 다수의 발열증상자들이 이미 나타났으나 당국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함구 또는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5월 2일까지

김정은 총비서가 열병식 참여자들과 수십 차례 릴레이 사진촬영을 했다는 점은 이때까지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 5월 4일 오전 일시적인 전국적인 외출금지령 조치를 취했다.¹⁾ 아마도 5월 2일에서 3일 사이 전국적으로 발열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당국이 인지하고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전국적인 발열 체크 및 1차 조사 등을 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국회의 보도에 따르면, 8일 유열자(발열증상자)로부터 채집한 검체의 검사 심의 및 결론, 12일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의 개최를 통해 ‘최대비상방역체계’를 발동했다. 8일이 채집한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린 시점인데, 4일 오전부터 외출금지령을 내리고 8일까지 5일 가량 전국 발열 체크 데이터를 수집하고 1차 치료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4월 말부터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확대”되었음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김 위원장의 국가비상방역사령부 방문 보도에서 35만 명의 유열자(발열증상자)가 나왔으며 그 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고 5월 12일 하루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1만 8,000여 명의 신규 발열증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리하면, 5월 2일 이후 상황 인식, 4일 전국 조사, 5~8일 데이터 분석, 1차 치료 및 감염 결론, 12일 당 중앙위 정치국회를 통한 조치 발동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상황 인지에서 조치 발동까지 9~10일 정도 소요됐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은 다르지만, 2020년 7월 발동된 ‘최대비상방역체계’는 7월 19일 탈북자 월북 후 7일 정도 소요된 바 있어 이때보다 공개와 조치 발동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오미크론 감염 관련 북한 발표 내용

날짜	발표내용
4.25.	열병식 진행
4.26.~5.2.	열병식 참가자 김정은 위원장 릴레이 사진촬영
5.2.~5.4.	상황 심각성 인지, 외출금지령(4일) 속 전국 발열조사 실시
5.4.~5.8.	전국 데이터 수집 및 검토, 1차 치료 조치, 오미크론 감염 결론
5.12.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당 정치국회의 ‘최대비상방역체계’ 발동 - 전국 발열증상자 35만여 명 확인, 16만 2,200여 명 치료 조치 - 12일 하루 전국 1만 8,000여 명 신규 발열증상자 발생
5.13.	18만 7,800여 명 격리 및 치료, 6명 사망(확진자 1명)

출처: 저자 작성.

1) “북, 어제 외출금지령 내렸다 해제 동향(종합),” 『연합뉴스』, 2022.5.5.

4월 중대 행사 및 열병식이 결정적인 오미크론 확산 계기

4월 북한 내부 동향 측면에서 보면 확진자 발생의 가능성, 확진까지의 시간적 연속성이 발견된다. 4월 혁명적 대경사의 달을 맞아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잇따랐고 4월 25일에는 열병식에 2만여 명이 동원됐다. 전국 각 군단 및 학교에서 열병식 종대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연습을 위해 한 달여 이상을 평양에서 체류했다. 열병식이 끝난 이후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하는 참여자들의 사진촬영 일정으로 5월 2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인원들이 계속 평양에 체류했다. 열병식 행사와 사진 촬영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감염이 이뤄졌다면 열병식 직후 사진촬영 후 참가자들이 귀향하면서 전국적 전파가 이어졌을 공산이 크다. 정치국회의에 감염자로 보고된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들”은 열병식에 참여했던 특정 집단일 가능성도 있다. 평양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다수의 집단적 발열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함구하며 방치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 평양에서 발생했다는 점, 전국적인 동시다발적 확산을 지도부는 심각하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공개형식에서 나타난 심각성 인식이다. 북한은 2020년 1월 28일 국가비상방역체계 선포 이후 방역 안건을 다룬 당 주요 회의를 개최해 왔다. 방역 안건을 주의제로 올린 회의만 2020년 정치국회의 8회, 정무국회의 1회, 2021년 당대회 1회, 정치국회의 3회, 전원회의 2회 등이다. 특히 방역 관련 중대 결함 지적이나 결정은 모두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따라서 이번에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를 통해 확진자 공개 및 최대비상방역체계를 단행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현재의 상황을 ‘국가최중대 비상사건’으로 규정한 부분이다. 기존 방역 관련 의제를 다룬 정치국회의에서 방역 상황의 심각성을 규정하는 표현 중 가장 최상급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방역위기’, ‘중대결함’, ‘중대사건’ 정도의 표현이었다.

오미크론 경각심 불구, 최근 느슨했던 방역과 열병식 강행

셋째, 조치에서 나타난 심각성 인식이다. 2020년 첫 번째 ‘최대비상방역체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020년 7월 19일 북한이탈주민 김모 씨가 한강하구를 따라 개성으로 월북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7월 25일 당 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통해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특별

경보 발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전국 지역 및 단위별 봉쇄·격폐, 감염 전파 공간 차단 등 물리적 봉쇄 조치와 전주민 집중검병검진 실시 등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초기와 현재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통제조치로 볼 수 있다. 오미크론은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이 30~50% 가까이 높다. 4월 말부터 35만여명의 발열증상자가 발생하고 12일 하루에만 1만 8,000여 명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봐서 단순 발열증상 이상으로 실제 오미크론 감염자가 상당수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5만 명 유열자(발열증상자) 수는 코로나 검사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초보적인 발열 체크를 통해 파악된 수로 보이며 일정 격리 조치 이후 치료된 것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속선상에서 사망자 규모 역시 검사 역량의 측면에서 정확한 수치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말, 오미크론이 출현한 이후, 북한 매체에서는 오미크론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의 성명, 위험성 및 전파력에 대한 의학적 설명, 중국과 한국의 오미크론 전파상황을 꾸준히 보도해왔다. 이와 같이 오미크론에 대한 북한 당국의 예의주시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방역에 대한 강조가 느슨해진 부분, 4월 태양절, 김정은 집권 10주년, 조선혁명군창건일 열병식 등 대규모 인원이 운집한 행사들을 강행한 것이 결정적으로 확산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정치국회의를 통해 감염 확진 상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거나 정치적 의도보다는 일차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집단 행사와 유동성에 따른 전국적 감염 확산 가능성, 수도 평양에서 감염자 및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통치의 부담감, 신속한 대응 및 통제조치로 내부적 신뢰성을 보이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지역 봉쇄·차단 및 격리시설 중심의 대처

다음으로 이번에 단행된 조치들 가운데 주목할 부분을 살펴보자. 우선 “전국 모든 시, 군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 격폐한 상태에서 상업과 생산활동 조직”을 지시한 부분이다. 물리적 제한 조치로 보면, 2020년 8월 제정된 「비상방역법」에 따르면 ‘초특급’ 방역등급에 해당한다. 다만, 단위별로 격폐를 한 상황에서도 사업이나 생산활동은 지속하는 한편 별도의 휴교 조치가 언급되지 않아 개별 주민 차원의 활동은 제한적이지만 열어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2> 「비상방역법」(2020.8.) 방역등급 규정

등급	상황	조치
1급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이 있는 상황	국경통행과 동식물, 물자 반입 제한
특급	실질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국경 봉쇄 및 코로나19 발생 지역 봉쇄
초특급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상황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 봉쇄, 집체모임과 학업 등 중지

출처: 오승준·하승희,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대응: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2호(2020), p. 8.

두 번째로 “과학적이며 집중적인 검사와 치료 전투 시급히 조직전개”, “전주민 집중검병검진 엄격히 진행, 의학적 감시와 적극적 치료대책”을 강조한 만큼 단위별로 의심증상자나 열병식 참가자들에 대한 일정한 격리나 검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진 키트나 장비 부족으로 통상적인 코로나 검진체계보다는 발열체크와 문진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검진보다는 발열 증상자에 대한 ‘격리’ 중심의 조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미 18만 7,800여 명을 격리 및 치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치료 대책은 오미크론 특성상 특정 치료제 사용보다는 발열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 격리 후 해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감염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이를 수용할 격리시설 추가 설치, 격리기간 지급하는 물품이나 일상용품 부족 등은 일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백신 지원을 받을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오미크론 확산 추이로 본다면, 백신 접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백신 지원이 이뤄진다 해도 상당 기간이 소요된 이후 들어갈 수밖에 없어 크게 효용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북한 당국 입장에서 혼란 없이 적절하게 격리조치를 통해 관리하며 감염 확산을 받아들여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향후 장기적으로 코로나의 변이종들이 지속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을 대비해 현 실태를 공개하고 추후 국제기구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최대비상방역과 생산·건설의 병행,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세 번째로 김정은 총비서가 강조한 계획된 경제사업 및 생산활동의 지속,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완수 부분이다. 지역 및 단위별 봉쇄 조치와는 일정하게 상충할 수 있는 부분임에

도 직접 강조한 것은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당면한 영농사업’인데, 극심한 봄 가뭄에 이어 모내기철이 겹쳐 이 시기를 놓칠 경우 올해 농업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강조한 화성지구 1만 세대 건설과 주요 건설사업 역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중요 사업이란 측면에서 지연될 경우 올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전국적 지역 봉쇄 속에서도 농업 및 건설 현장은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국면 속에서 경제 목표치의 하향 조정, 제한적 북중 교역 유지, 여기에 맞는 생산활동 적응이 이뤄져 이번 최대비상방역조치로 당장의 경제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중 교역 재개를 위한 일정이 더욱 지연되면서 경제 상황 전반의 개선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비상방역체계, 의료적 비상계엄 통한 사회통제 강화

주목할 부분은 최대비상방역체계로의 전환으로 인한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의 강화다. 북한은 강한 봉쇄와 통제 위주의 방역을 유지하다가 지난 해 말부터 ‘선진방역’과 ‘인민방역’을 강조하면서 다소 유연한 방역체계를 모색했는데, 다시 통제 중심의 방역 및 사회통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상방역체계는 일종의 의료적 비상계엄의 형식을 갖는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방역을 명분으로 사회를 예외상태에서 통치하는 의미를 갖는다. 2020년 8월 제정된 비상방역법에 따르면 비상방역지휘부는 내각 총리 책임, 인민무력성, 총참모부, 중앙급의 국가보위성, 검찰, 사회안전성, 군수, 특수단위와 국가계획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과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이 주도하는 통제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수도 안전 보장 차원에서 평양시 출입 제한, 국경지역 감시 강화, 지역 물품 이동의 통제, 비상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 매기기, 의심증상자의 격리 등公安·치안 기관이 주도하게 된다. 그러면서 생산이나 건설에서는 목표 달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긴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최대비상방역체계는 통제 효과, 생산 및 건설에 대한 통제적 감시, 통치 차원의 효율 성과도 연관돼 있다.

특히 핵무기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 압박 및 정세 유동성에 대응하여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의미도 갖게 된다. 핵실험이나 기타 정세의 엄중한 상황 발생시 주민 통제에 효율적인 체계로 전환하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다. 4월 중대 행사 이후 사회적 통제의 고삐를 쥐면서 핵무기 고도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에서도 ‘최대비상방역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긴급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대응조치이지만 통치 차원에서 본다면, 무기실험 및 대외정세에 대응한 내부의 감시와 공안정국 조성 의미도 갖는다. 정치국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전선과 국경, 해상, 공중에서 경계근무를 더욱 강화하며 국방에서 안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한 부분은 핵무기 고도화 행보에 따른 대외적 압박에 대응한 군의 결속과 긴장감 주입과도 연관돼 있을 수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지시문 및 내각 비상지시문이 심의·승인·하달된 부분도 이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 고도화 행보 지속, 방역위기상황 의식 미사일 발사 대내외적 미공개 가능성

이번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사태는 대외적 행보에는 당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무기 실험 일정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략무기 개발 의지와 변함없는 대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12일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 내용을 공개한 직후 오후에 초대형 방사포(KN-25) 3발을 발사한 것은 오미크론 감염 국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 행보와 대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내부적인 ‘방역위기상황’을 의식해 무기 실험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공개를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차를 두고 나중에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5월 4일 ICBM 추정 발사, 5월 7일 SLBM 추정 발사, 5월 12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오미크론 확산 국면과 맞물려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방역위기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를 내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 미사일 발사와 달리 핵실험 일정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미사일 발사의 경우 2020년 코로나 발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점, 발사 후 한미 당국이 일정한 제원 상황을 인지·추정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점검 및 대외적 메시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핵실험의 경우, 그 대내외적 파급력이 확연하게 다르고 감행했을 경우 공개를 통해 핵능력을 과시해야 하는 이벤트에 속한다. 현 국면을 ‘방역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보건의료 협력 가능성을 대비하여 한국의 주도적 역할 필요

북한이 당장 한국이나 미국이 제안하는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의 최근 전력 증강 행보,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선제압,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의 북핵 공조 등에 대응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 선뜻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이중트랙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특히 북한은 지난 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제시된 전략무기 개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술·전략 무기 실험에 속도를 내고 있고 향후의 무기 실험 행보를 위해서도 의도적으로 긴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적 지원 제안을 수용하면서 정세를 유화적으로 조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만, 최대비상방역체계로의 이행을 강조한 만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추가 감염 차단 및 확진자 관리, 치료 지원과 관련된 보건의료 협력을 국제사회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정부는 2022년 1월 10일 “통제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발전된 선진적인 방역,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을 공언한 바 있으나 이러한 방향이 국제사회로부터 백신이나 치료제를 도입하거나 국경 개방과 같은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에서 유입되었다고 보고된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감염 전파가 빠르고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북한 엘리트들이 갖는 위기의식이나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부의 백신이나 치료제 도입 없이 확진자 격리나 도, 시, 군 등 지역 단위의 전면 폐쇄 등 봉쇄와 통제 위주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유지, 강화할 수도 있다. 문제는 북한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이상, 감염에 대한 면역력이 취약하고 새로운 변이 유입에 대한 우려로 물자반입 및 인적교류 재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북한의 선제적 협력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이 당면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및 인도적 위기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부의 필요(needs)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긴급한 상황 대비와 대응을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 채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북한 백신 혹은 치료제 구매 및 조달을 위한 지정기여를 추진하고, 5월에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자금 출연 및 기술협력 협의를 추진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INU 2022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